

북한개발소식

2024 JAN

01

통권 219호

이달의 주제

코로나19 이후 북한 인권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1화)

북한뉴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시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코로나19 이후 북한 인권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4 JAN

이달의 주제 :

코로나19 이후 북한 인권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코로나19 이후 북한 인권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10** 정베드로 목사_ 코로나 19 이후의 북한인권 및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
- 칼럼_2 16** 박송아_ 강제송환 그 후의 이야기: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
- 칼럼_3 23** 문동희_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실태
- 탈북민 수기 30** 지한나_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1화)
- 서평 34** 핵의 변곡점 (시그프리드 해커, 엘리엇 세르빈)
- 북한뉴스 37**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시 외
- 북한 기도 제목 44**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류 드라마를 시청,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다. 특별히 본 선교회는 국경 봉쇄와 정보 통제의 강화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23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해이다. 가장 오랫동안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를 이어왔던 중국도 22년 말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북한이 방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와 국경봉쇄를 진행했었다 보니, 전염병의 위험이 사그라지는 만큼 북한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화물 열차 운행 등 대외 무역을 점차 재개하기 시작하였고 해외 노동자나 외화벌이 인력의 본국 송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경개방이나 외부와의 인적 교류는 23년 말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인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보다는 여전히 강도 높은 사회 통제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며, 오히려 코로나19 종식이 탈북자 강제 복송 재개 등 인권 침해의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개발소식에서는 최근 북한의 식량 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을 주제로 이미 다룬 바가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각국의 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인권 문제의 개선과 기독교 박해 중단 및 신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관련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한다.

코로나19를 전후한 북한의 사회통제 정책과 인권 침해

근래 북한의 통제 정책은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23년 초까지 무려 40개가 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¹ 북한에서는 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지도자와 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가운데 법은 단지 정치적인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당국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법률로 공포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정되는 법과 그 내용을 통해 북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국경 통제를 포함한 국내외적 사회 통제를 강화했고,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된 현재(23년 말)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2020년 제정된 ‘비상방역법’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통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법은 국경출입이나 밀수 및 밀수품 유통 등에 대해서 적게는 5년 이하에서 많게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조항을 크게 늘렸는데, 그 근거 조항은 대부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비상방역법’에 집중되어 있다.²

코로나19 이후에도 북한의 통제는 그리 크게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무역 활동 일부와 해외 북한 주민 귀국 등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비상방역법상 북한은 방역 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의 3단계로 구분한다. 1급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국경 통행 및 물자 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뜻하며, 특급은 국경이나 국내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초특급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북한의 현재 국경 통제는 비상방역법 상 1급 수준의 조치로 볼 수 있다.³ 북한의 국경 통제 양상을 미루어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1

급 수준의 방역 명목의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로 북한은 사상 투쟁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등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법들은 한류를 비롯한 각종 외부 미디어 접촉, 유입, 유포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북한 당국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은 계속해서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2월에는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주민들의 말투와 행동까지 규제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규율과 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밀보호법의 경우 이미 형법에 간첩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유출을 처벌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장마당과 역전 인근 사진 촬영도 검열하는 등 내부체제단속에 해당 법이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북한 당국은 확고한 사상 투쟁과 문화 통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23년 12월 3일, 11년 만에 개최된 제4차 어머니대회에서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개회사는 물론 별도의 연설을 진행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 그런 현상을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의 사상 투쟁 의지와 함께 특별히 젊은 세대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현상 타파를 위한 어머니들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악화된 제 삼국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외부에서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변화된 주변국의 정책과 통제 상황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권은경] 북한이 4년 동안, 40개 새 법을 만든 이유,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3.04.28.),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d8cc740acbd/kekcu-04282023094306.html>>

2 “서라!” 3번 경고조차 없다...’외부와 차단’ 즉결총살 판치는 北, 중앙일보 홈페이지 (2023.03.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402#home>>

3 북한, 3년 7개월 만 국경 공식 개방...한국 “탈북민 강제복송 가능성 우려”, VOA미국의소리 (2023.08.28.), <<https://www.voakorea.com/a/7243872.html>>

4 “북 장마당서 손전화 ‘묻지마’ 단속”,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3.12.1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ellphone-12132023093550.html>

23년 10월, 중국이 아시안게임 직후 탈북자 600여명을 강제 복송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에도 80명, 9월에 40명 등을 강제 복송했다.⁵ 중국에 억류되어 있었던 탈북자의 규모는 많게는 2,600명 수준까지 추산된다.⁶ 올 6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중 국경지대에서는 탈북자들을 수감하는 변방대 시설이 확장되는 정황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시설 규모로 볼 때 수감중인 탈북자 규모가 600명에서 2,000여명 규모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⁷ 북한인권단체에 따라서는 이들 중 아직 복송되지 않은 1천여 명 가량의 탈북자들이 수감 중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강화된 디지털 통제로 인해 탈북자들은 더욱 적대적인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거치며 기존부터 힘써왔던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했다.⁹ 특히 전방위 비디오 감시체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범죄 추적 시스템 텐왕(天網, Skynet)은 6만여 명이 밀집한 콘서트장에서도 용의자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어있다. 실제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문성광 씨가 23년 7월 중국에 방문했다가 공안에 일시적으로 체포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과거 중국에서 붙잡혀 복송되었던 기록으로 인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어 탈북민 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했다.¹⁰

중국의 정책과 법령도 한층 더 탈북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간첩법 개정안의 제4조 6항은 중국 내에서 혹은 중국인과 중국 내 조직을 이용하여 중국이 아닌 제3국을 대상으로 벌인 ‘간첩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과 연관된 활동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하다. 탈북자들이 남한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

로 남쪽) 국경까지 이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길안내나 숙식 해결 등을 위한 중국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북자를 돕다가 적발될 경우, 전과 달리 간첩 혐의 적용으로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 일에 참여하는 중국 현지인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탈북자 구출 단체들의 설명이다.¹¹

이 외에도 중국은 ‘육지국가경계법(中华人民共和国陆地国界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38조는 불법월경을 금지하고 유사시 불법월경자에게 자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탈북자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사용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¹² 중국의 탈북 여성들에 대한 파악과 통제 활동도 강화되었다. 통일만연합이 2020년부터 중국 내 탈북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공안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에게 신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임시거주등록증’으로 불리는 이 서류는 공식적인 신분증이 아닌 해당 공안의 관할 지역 내에서만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이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비송환을 약속하고 임시거주등록을 유도했으며 등록된 탈북자들의 휴대폰을 한 달에 2~3번 조사하는 등의 감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등록된 여성이라도 유사시 강제 복송을 당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통제와 감시를 위한 정책일 뿐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통일만연합의 설명이다.

이번 강제복송 재개를 계기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강제복송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향하여 탈북자 복송 중단과 탈북 여성 정책 변화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3년 5월 3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유엔 기구가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고문 위험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로 추방이나 송환하지 말라는

5 中, 탈북민 500명 이상 강제 복송,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2023.10.13.), <<https://www.hrw.org/ko/news/2023/10/13/china-forcibly-returns-more-500-north-korea>>

6 중국 억류 탈북민 2600명 넘어... "내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강제복송", 뉴스핌 (2023.08.1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11000887>>

7 "中 탈북자 구금시설 확인...중국 내 최대 2천명 수용 추정", 문화일보 (2023.06.14.),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061401039910126002>>

8 "中에 북한국적 수감자 1천명 남아...계속 복송할 것", 연합뉴스 (2023.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121200504>>

9 중국의 사회통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북한선교환경을 주제로 다룬 오픈도어 북한개발소식 23년 08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탈북기자가 본 인권] 중국 '반간첩법'의 위험,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3.07.26.),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defectornkhr-07242023172412.html>

11 [탈북기자가 본 인권] "중국 반간첩법 때문에 탈북구출 어려워진다", RFA자유아시아방송 (2023.08.09.),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defectornkhr-08082023151712.html>

12 이규창 (2023), "국경 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 침해",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3-26 (23.08.30.).

13 김정아 (2023),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임시거주등록증은 중국공안의 인권유린 감시체제", 오픈도어 북한개발소식 23년 8월호, 24-31.

고문방지협약 준수, 그리고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특히 24년 1~2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제 4차 인권검토(UPR)¹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탈북자 강제 송환과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인권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¹⁵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 불법이민자라는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23년 7월 중국에 보낸 강제복송 중단 요청 서한에 대해 중국은 “현재 북한 내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인 간에 발생한 부상과 법에 따라 부과된 처벌은 협약에 규정된 ‘고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하는 북한 출신인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며 “이들에게는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출입국 통제 관리 관련 법에 따라 ‘임의적 구금’은 없다”,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천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¹⁶

북한의 계속된 극심한 기독교 박해

코로나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포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전염병 전파를 우려하여 감소했던 공개처형이 코로나19 종식 발표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¹⁷ 향후 예상되는 국경 통제 완화와 외부와의 인적

왕래 재개 등을 대비해 주민들의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억누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북한은 꾸준히 극심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23년 3월 발표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9년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5명이 공개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50여명이 강제추방된 사건 등 북한 내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⁸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기독교 박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본 선교회는 해외 선교현장을 통해 북한 내에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발생한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중에는 성경 소지 및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예배 모임을 가지다가 급습을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23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의 예수모임자들(지하교회 교인들)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¹⁹ 본 선교회 역시 23년도에 발생한 여러 건의 기독교 박해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성경 소지 관련 처벌 외에도 지하교회 적발과 지도자에 대한 처형, 그리고 지하교회 교인들로 추정되는 여러 가구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 등이 있었다. 이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고, 그 외의 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연좌제에 따라 그 가족들도 강제추방하는, 그 동안 북한의 전형적인 기독교 박해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북한은 어떠한 개선 없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극심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증진과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써야 함은, 특별히 신앙을 이유로 생명

14 UPR(Universal Periodical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약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유엔 회원국은 제출된 보고서와 앞으로 중국정부가 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중국에 사전 서면질의를 하고 UPR 당일에도 중국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다. 중국에 대한 1·2차 UPR에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 피해 등을 비롯해 중국 내 탈북 난민에 관한 언급이 다수 있었지만 2018년 3차 때는 전혀 없었다.

15 NGO들, 중국 UPR 앞두고 ‘탈북민 보호 촉구 보고서’ 유엔에 제출, VOA 미국의소리 (2023.07.20.), <<https://www.voakorea.com/a/7187812.html>>

16 중국, 살몬 보고관 서한에 “탈북민은 불법체류자”,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3.10.13.),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unnkchinadefector-10132023161310.html>

17 日 언론 “北 ‘코로나 종식’ 후 공개처형 증가…한류 유입도 경계”, 연합뉴스 (2023.10.12.),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039500073>>

18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185

19 북 지하교인 5명 예배 중 체포,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3.05.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religion-05192023095954.html>

의 위협을 받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책임이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화와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북한 스스로도 ‘우리식 인권’을 주장한다. 지난 12월 11일,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인권 백서를 발표했다. 북한 매체는 해당 백서의 발간을 보고하면서 자신들은 가장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 속에서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현재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은 자신들의 체제를 공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²⁰

그렇지만 북한의 강도 높은 사회통제와 비상식적인 형벌, 그리고 공개처형 등의 공포정치는 주장과 모순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독특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의 가치가 더 잘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광민(2023)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관계권적 인권을 제시한다.²¹ 관계권은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인 만큼 인간의 권리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규정, 증진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계권적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하광민은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할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3가지로 꼽았다.²²

첫째, 북한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신앙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탄압과 차별은 북한 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관계권을 훼손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기존에 애써왔던 신앙의 자유 또한 관계권 차원에서 충분히 옹호하고 북한에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가족이 흩어져서 지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권을 훼손하는 일이

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사회권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사회권에서는 북한 정권의 안정이 주민의 인권 개선과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권에서는 북한 정권의 비도덕성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오랜 기간 세계 각지의 기독교 박해 양상을 분석하면서 기독교 박해의 원인을 6가지 동인으로 정리했다. 그 중 하나가 ‘독재적 편집증 (Dictatorial Paranoia)’이다. 이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국가 통제를 벗어난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경향을 뜻한다.²³ 북한의 과도한 통제 정책이 정말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요구되는 통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한이 스스로 되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 속히 북한이 자신들이 가진 모순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고통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2024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촉구한다. 

20 북한이 ‘인권 백서’ 발간…“미국·서방이 무참히 인권 유린”, 연합뉴스 (2023.12.11.),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1145300504>>

21 하광민 (202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관계권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2023년 11월호, 19-30.

22 위의 글, 27-29.

23 What are ‘Engines of persecution’?, World Watch Monitor <<https://www.worldwatchmonitor.org/what-are-engines-of-persecution/>>

코로나 19 이후의 북한인권 및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고, 이어서 12월 19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역시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의해 주도됐으며 특별히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복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됐다.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수년간 이어졌던 국경 봉쇄를 해제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복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정한 것이다. 또한 이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써 10년 연속 결의안에 반영되고 있다. 나아가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그 이후의 북한의 주요한 인권상황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공포정치와 공개처형

북한 지도부는 2020년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2021년 8월 25일 사회안전성이 하달한 '북부 국경 봉쇄 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북한정권은 '공포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공개처형 대상용 희생양을 만들어 사형을 집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데일리NK일본 등 외신에 따르면 2023년 8월 북한에서 남녀 9명이 소고기를 팔다가 적발돼 혜산시 비행장 주변 공터에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가 피고인들의 죄목을 읽고 사형판결을 내리자마자 말뚝에 묶여 있던 9명은 총살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는데 양강도 수의방역소장, 양강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평양 모 식당 책임자, 군 복무 중 보위부 10호 검문소 군인으로 근무했던 대학생 등이 처형 대상이었다. 북한은 개인이 소를 소유하거나 도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단순 경제범이 아닌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북한에서 소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비행장에 집결한 2만5천여 명의 주민은 보안요원과 군인에 둘러싸인 채 잔혹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봐야만 했다.

이와 같은 공개처형은 10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받고 국가반역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즉각적으로 형이 집행된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설마 고모부를 죽이기까지 할까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결국 김정은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의 잔혹함이 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30세도 미치지 못한 청년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당 간부와 인민들에게 본보기식 처형 대상으로 고모부를 선택했다. 이번 죽은 소의 고기를 판 주민들을 공개처형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지 노동당 고위간부와, 군부 핵심 인사를 막론하고 주민들에게 숙청과 처형에

의한 공포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정보와 문화 차단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을 제정하고 이어서 청년교양보장법(2021.8)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1)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그 외 북한의 체제와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 등 사실상 김정주의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북한에서도 이 정도까지의 잔인하고 한류를 배척하는 법은 없었는데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빌미로 주민의 이동권과 정보의 자유,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까지 제한한 것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이 허락하는 것 외의 콘텐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용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3장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면서 금지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TV·라디오·컴퓨터·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콘텐츠 유포·이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밖에도 외제 손전화(휴대폰)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지목했고, 복사가기·인쇄기를 통한 복제 행위도 금지돼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북전단 등을 지칭하는 '적지물'에 불순한 내용이 있는데도 주무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시청·이용·유포하면 처벌되며 괴뢰글(한국 출판물 등)과 그림, 상표 등 불순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최소 벌금부터 노동단련형, 최대 사형까지 처벌 규정을 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처벌 수위를 강력범죄 수준으로 높여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 탈북자 강제복송 배경

중국에서 코로나 기간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 북·중 국경지역 6개 지역의 변방대 등지에 수감되어 왔던 탈북자 600여명이 지난 10월 9일(월)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사실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복송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대북인권단체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에 즉각 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완화정책으로 북·중 국경에서 지난 7월부터 인적 왕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체적인 방역완화 조치를 발표하기 전인 8월 중순, 중국에서 코로나 기간에 체포된 탈북자 수십 명을 코로나 방역 확인 테스트를 위해 송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테스트 후 북한 국가방역사령부가 8월 27일 국경지역을 포함한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어 29일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90여명의 탈북자들을 버스에 태워 신의주로 복송하였다.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 한 달 기간 동안 2천명을 암암리에 송환하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후 10월 9일 600여 명을 마무리 하듯이 복송했다.

북한정의연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기업소 차량들이 10월 5일부터 이번 강제송환에 집중적으로 동원되어 10월 9일 저녁에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자들을 인계받아 호송하였다고 전해왔다. 송환된 탈북자들 중에는 탈북한지 25년 이상 된 여성, 임산부여성을 비롯하여 유아와 아동 등 노약자를 포함하고 있고, 90% 이상이 여성이다. 복송이 이뤄진 지역은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훈춘, 도문, 남평, 장백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일부지역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와 호송에 관여하고 지휘하기도 했다. 이번 복송사태는 중국과 북한의 치밀한 협조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반인도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복송된 탈북자들은 북·중 국경지대의 보위부 구류장에서 평양에서 특파한 보위사령부의 지시 아래 격리시설에서 끔찍한 방법에 의한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있다. 강제송환 후 곧바로 보위부의 고문과 감금이 시작되고 기독교 등 외국문화와 사상에 깊이 접촉한 사람은 비밀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예상된다.

재중 탈북자 지위 보호와 강제송환 중지를 위한 제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수령절대주의와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할 것과 중국은 재중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non-refoulemen)을 준수하고, 피난처 제공과, 탈북자 색출을 위한 북한 보위부와 협력 금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대한 접근부여,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 및 그 출생아들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국제난민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탈북민들을 인신매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북한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정규화 하고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중국 국적을 얻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난민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유엔난민기구(UNHCR)의 활동을 허용하고, 탈북자들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협약(강제송환중지의 원칙, 고문방지 협약 등)에 따라 매우 당당하고 정당하게 중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대표와 유엔최고대표에게 중국의 탈북자 송환을 중지하고 중국이 국제기구와 함께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난민보호소 방안을 위해 협력하도록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매년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결의안을 통해 중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결의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결의안이 통과됨으로 그나마 대한민국의 위신이 국제사회에서 실추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국·일본·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지난 12월 15일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는데, 미국 유엔 대표부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유엔 전문가들과 보고서는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강제 송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시민사회(NGO)의 역할로는 국제사회에 중국의 탈북자의 송환문제가 반인도 범죄에 동조하는 것을 알리고, 한미일 정상외 캠프데이비드 성명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만행을 규탄하고,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이 협상 전제조건으로써 테이블에 오르도록 노력하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2조)에는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주민들과 탈북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 없는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북을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주민들도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과 인격을 가지고 존중받고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이다. 🙏

강제송환 그 후의 이야기: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

박 송 아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코로나19는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2020년 1월 북한 정권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최고 수준의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며 봉쇄정책 위반 시 처벌을 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2년에는 ‘비상 방역법’과 ‘의료감정법’을 일부 개정하였다.¹ 북한 당국의 극단적인 조치는 준비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정보와 교류에 있어 완전한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 정권은 팬데믹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주민들을 향해 불필요한 통제와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하였다.

국경 폐쇄의 끝, 강제송환의 시작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되었을 당시,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탈북자들의 복송은 자체되었다. 중국 또한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 중이었기에 다수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일부는 한족 남편에 의해 풀려나기도 했지만,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구류 시설에 장기간 구금된 탈북자들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27일, 북한은 3년 7개월 만에 국경 봉쇄에 마침표를 찍었고, 체포되어 구금된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시키는 정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후로 일어난 대규모 강제송환을 예상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외 다수의 시민단체는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회원국, 조약기구, 특별보고관과 토의를 진행하고 정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다방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600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강제복송 되었다. 송환된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체포되어 송환되는 순간까지 중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동기를 가진 불법체류자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강제송환 피해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피해

중국의 강제복송의 경우, ‘농 르플르망’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 르플르망(non refoulement)’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선 안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북한에 복송된 이후 겪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중국 주요 탈북민 구류 시설이 있는 5개의 지역은 단둥시, 장백현, 남평진(화룡시 남편진), 도문시, 훈춘시이다.

[자료 1] 복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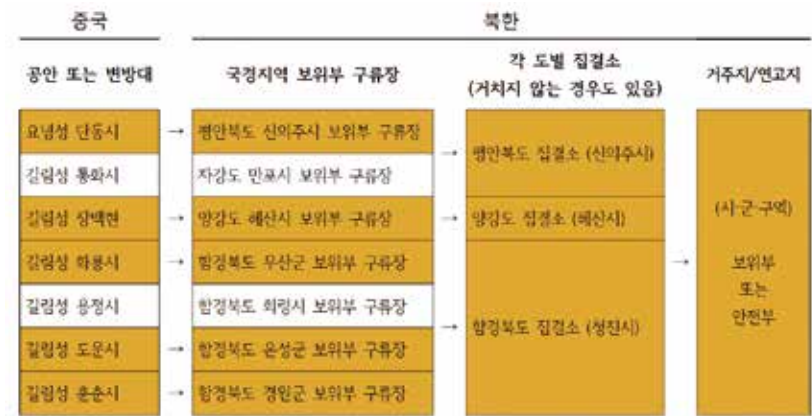


1 통일연구원. (2023).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KINU 연구총서 22-10).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3944>.

2 [자료 3] 참조

이에 따라 순서대로 각 지역으로부터 복송 후 이어지는 기본적인 이송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 복송 이후 구금시설 이송 경로



현재 복송된 탈북민들과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하지만,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서 기록한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분석해볼때, 그들의 구금 과정과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복송된 후 국경 지역 보위부로 이송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임시 수감되며 초동 조사를 받는다. 그 이후 해당 보위부는 중국 측에서 인계 받은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을 개인별로 조사하며, 이에 따라 어디로 이송할지 결정한다. 탈북민들은 조사 기간 동안 과밀한 감방에서 장시간 부동자세를 강요받거나 보위부원에게 나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당하는 등 여러 고문행위를 버텨야 한다. 여성 탈북민들은 구류장 도착 즉시 나체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뽕뿌질”을 강요받는다. 단순 도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종교를 가지는 것과 같이 국가적으로 엄중하게 보는 범죄와 연루된 정도에 따라 중앙급 또는 거주지 인근 도·시·군 보위부로 이송이 되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경지역 시·군 보위부 구류장이 포화되거나 원거리의 다른 도나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탈북민들은 도 집결소에 임시 수용된다. 이때 이송 대기하는 동안 강제로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강제 노동은 이미 복송 과정에서 영양실조와 고문으로 인해 허약해진 탈북민들에

게 몹시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적절한 치료, 약 공급, 균형 잡힌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수감자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된 상태로 방치된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정상이 고려될 수 있는 이유의 탈북으로 인정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로서 노동단련형 또는 교화소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송 이후 계속되는 가혹행위와 열악한 식량 제공으로 인해 쇠약해진 탈북민들의 몸은 탄광에서 땀을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가혹한 노동을 견디지 못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상과 사고가 빈번하며, 수감자들은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실제로 노동단련대와 교화소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파라티푸스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들로 사망한다.³

거주 지역 보위부로 이송된 탈북민들은 혐의에 대한 입증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예심’단계를 거친다. 예심 기간은 수일에서 수개월이 될 수도 있으며, 예심 기간 동안 한국행을 하려던 의도나 교회와 접촉했다는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훨씬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보위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고문뿐만 아니라 식량, 식수, 위생용품 등의 공급 같은 기본적인 권리 또한 박탈당한다. 특히 여성 수감자들은 강간, 강제낙태, 언어폭력 등 다양한 성별 기반 폭력에 노출된 상태로 구금생활을 한다.

예심이 끝나면 탈북민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받게 된다. 북한은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판 과정의 존재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⁴ 또한 일부 탈북민들은 공개처형이나 비밀 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은 공개처형 장소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의 혐의를 낭독⁵하고 공개처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포심을 심고 북한 체제를 향한 반항과 의구심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수법으로 북한은 수감자들을 본보기 삼아 공개처형을 탄압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약 800명의 공개처형 목격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공개처형·비밀처형·시체 암매장과 관련된 장소를 기록하며 북한 내의 공개처형의 실태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3 통일연구원.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8375>.
4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진행한 50명의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았을 때 재판 유무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불충분하며 범죄 유형, 시기, 그리고 구금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면담자들에 의하면 형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형식상 수감자에게 읽어주는 보위부 내 비공개 재판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정당한 재판 절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5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서울, 2021)

잠재적 강제실종 피해자들

북한 형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는 북한 형벌체계 내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띤 범죄들이다. 어떤 범죄들이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⁶ 등의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확인된 기준은 없지만, 예시로 한국행을 기반으로 한 탈북 또는 탈북알선, 한국과의 정보 또는 돈 교류, 종교적 행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등이 있다.

체포된 장소, 중국 체류 기간, 가족의 과거 탈북 이력, 예심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 등에 따라 탈북민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탈북력이 있거나 중국 거주 당시 한국 또는 기독교와 연관되었던 탈북민들은 정치범으로 처리된다. 정치범죄로 구금되는 이들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강제실종 피해자들이다. 강제실종은 당사국 산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과 뒤이어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것을 칭한다.⁷

탈북민들의 복송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은폐된다. 국경지역 보위부나 도·시·군 보위부에서 예심을 받을 당시에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구금 사실이나, 최종 처분, 생사여부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주지 않기에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 특히 수감자가 도급 보위부로 이송되는 경우, 가족들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 지인 또는 소문을 통하여 수감자의 소재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가족은 수감자의 생사를 알기 위하여 뇌물이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면회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수감자들은 관리소 (정치범수용소)에 이송되는 순간 그들의 신분증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 또한 박탈된다. 대부분 형량과는 관계없이 외부 사회로의 복귀는 금지되며 영원한 고립과 구금에 처해진다. 관리소로 가족이 보내진 일부 탈북민 면담자들은 가족의 생사를 물어보는 질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졌다”라는 보위부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북한 내에서는 당연히 여겨지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관리소로 이송된 소식을 접함과 동시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2012. 5. 14, 수정보충) 제60조, 제 63조, 제64조

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10) 제 2조

에 실종 피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책임규명을 위한 인도에 반한 죄 정보 수집과 기록

고문, 성범죄, 강제실종 등 언급된 인권 문제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억압적인 정권이란 씨앗에서 인권침해가 북한 사회의 전반으로 깊게 뿌리내렸고, 우리는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변해가고 있는지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반사회주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반동사상문 화배격법 (2020)’, ‘청년교양보장법 (2021)’,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들은 외부 문화 유입 차단이 목적으로 한국 영화, 노래,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한국 말투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⁸ 최근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 아래 공개처형을 법률화하는 조항 또한 규정⁹되었으며, 이는 북한이 공개처형 방식을 적극적인 교양과 단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자의적 체포와 강제실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1,000명이 넘는 북한 국적자들이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되어 강제복송될 위험에 처해있다. 앞으로 6.25 전쟁 이후 실종된 수만 명¹⁰에 더해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성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북한은 살인, 노예화,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구금, 고문, 성범죄, 박해, 강제실종 등 다양한 인도에 반한 죄¹¹를 자행해 왔다. 오늘날까지도 지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 즉 북한 국가기관 및 소속 성원들을 재판 등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증거 수집과 문서화 작업은 준비 단계에서의 필수적이다. 코로나 이후 내부

8 “북한, 청년교양법 위반 시 교화 10년형...젊은 층 ‘어이가 없네’.” 데일리 NK. 2022년 2월 16일 수정, 2023년 12월 18일 접속, <https://www.dailynk.com/20220216-1/>.

9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공개처형’ 명시...’군중 각성시켜야’.” 데일리 NK. 2023년 3월 23일 수정, 2023년 12월 18일 접속, <https://www.dailynk.com/20230322-5/>.

10 현재 9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되었고, 그 중 2만 명의 정보가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의 온라인 풋프린트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 있다; <https://nkfootprints.info/en/>.

1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2010년 수정) 제 7조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실태

문 동 희 (데일리 NK 기자)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식량, 석유, 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러한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 의약품 부족, 전력난 등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됐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국회에 올해 1~7월 북한 아사 건수는 240여 건이며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110여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이후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했다. 북한이 제정한 비상방역법은 방역 등급에 따라 격리,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갑자기 내려온 지시에 도, 시 전체가 봉쇄되고 주민들은 자가격리에 처해져 이동하거나 외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미리 식량을 구비하지 못한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하염없이 격리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이를 더욱 철저히 무시하는 조치를 했다. 사람의 인권과 생명보다 사회 안정과 정권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북한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특히, 비상방역법은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과도한 처벌 조항을 넣어 둔 것이다. 방역 조치 위반을 내세워 형벌로 사형을 내세우는 일은 생명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료3] 탈북민 강제 복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일 자	내 용
2023년 3월 20일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	유엔 회원국,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고관들이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
2023년 4월 1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공동보고서 제출
2023년 5월 8일 스위스 제네바 비정부기구 공청회	중국 정부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 의제화 촉구
2023년 5월 12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재중 탈북 여성이 직면한 인권유린을 논의, 강제추방의 위험,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제기
2023년 6월 13일 미 초당적 협의체 CECC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송환 위험에 대한 청문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중국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2023년 7월 20일 중국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 (2024년 1월 예정)	중국 강제송환 질의 및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심사 절차 이행 권고를 촉구하는 비정부기구 보고서 제출
2023년 9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유엔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2023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중국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논의를 요청하는 공개서한 발송
2023년 12월 7일 국제형사재판소 제22차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최근 일어난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 강조 및 국제사회 참여 요구

정의워킹그룹은 탈북민 면담과 오픈소스 자료를 통해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인도범죄를 기록하고, 책임기관의 구성원들과 지휘체계를 분석하며 증거를 누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그 관심에서 오는 동력이 검비된 증거자료는 지금까지의 범죄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일어날 인권유린 또한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북한에서의 비인도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은 참담한 사실이며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이 글이 절망감만을 안겨주는 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다시 한번 현재 북한 인권 실태를 인지하고, 그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상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글을 마친다. 

12 여기서 모두의 정보란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 상황을 포함한 가해자의 소속기관, 명령체계, 관련 법령 등 국제책임규명 메커니즘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뜻한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명분 삼아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방역 조치 위반자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비상방역법 위반자들을 대거 노동단련대, 교화소로 보냈다. 방역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불만을 드러낸 사람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다. 이 시기 북한은 포화상태가 된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도 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개의 법을 제정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영화나 녹화물의 유입·유포, 시청·열람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젊은 층의 사상이 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교양보장법’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한 청년들을 적법성과 심각성에 따라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 5~10년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개 처형’을 진행해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모두 북한 정부의 외부 정보 차단과 사상 통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한국 영화 및 한국식 언어 사용 등에 대해 최고 사형 등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와 다양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상방역법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생명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를 수용소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2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8월 국경봉쇄를 해제한 이후,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 합의를 통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거나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강제 복송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할 경우, 박해나 고문 등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형, 수용소 처분 등 과도한 처벌이 만연했던 북한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으며 이후 같은 해 7월 26일에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통해 최대비상체제로 대응 수준을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같은 해 8월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13개 처벌 조문을 담았다. 특히 최고 형량을 사형까지로 명시했다.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최고 형량을 사형까지로 명시한 것은 과도한 처벌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상방역법에 의한 봉쇄, 이동 통제, 넓은 범위의 출입 통제 조치 등은 주민들의 이동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

특히, 북한은 비상방역 조치 미준수를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고의로 당 정책을 위반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했다. 방역 수칙 위반자를 당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혁명분자, 특대형 범죄자로 낙인이 찍고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마당 통제, 경제난, 식량 사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만, 즉 체제 불안정성을 강력한 처벌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방역 수칙 위반을 빌미로 한 북한의 강력한 사회 통제는 많은 사람들을 각종 수감시설로 보냈다. 북한은 수많은 사람을 수감시설로 보내면서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자 새로운 시설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평안북도 피현, 황해북도 평산, 승호리에 정치범수용소가 새로 생겼으며 종합적으로 3만 여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수용인원의 약 10%에 해당하며 인구 약 1%에 달하는 많은 숫자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북한이 얼마나 강력한 공안 통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은 국경봉쇄기간 강력한 주민 통제와 외부 미디어 단속 활동을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제27조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에 명시된 사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 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불법) 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마약 밀수, 거래죄’, ‘고의적살인죄’ 등이 있다. 외부 미디어를 접하고 유포한 행위를 국가전복죄와 맞먹는 범죄로 취급하는 북한 당국의 행위는 사상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에 대해 외부 미디어를 내부로 유입하거나 유포한 경우 사형하거나 가족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위법자의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은 없다. 이는 북한 당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구금·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근대적인 연좌제를 고집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용소에 끌려간 북한 주민들은 하루 12~16시간 동안 위험하고 힘든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이들은 식량, 방한 장비, 안전 장비 등을 제공받지 못하며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곳에 부모와 수감된 아동들 역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영양공급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간수들은 교정이라는 명목하에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며, 즉결 처분할 수 있다. 이후 수감자들은 사망한 후에 화장되어 집단 매장되거나 산에 버려진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은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의 조직적인 관리하에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로 그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자유권, 식량권, 생명권 침해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데일리NK가 입수한 북한 비상방역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37개 지역을 봉쇄했다. 확인된 지역은 ▲강원도 평강군 ▲황해북도 린산군 ▲평안북도 삭주군 ▲함경남도 리원군 ▲평양시 순안구역 ▲양강도 해산시 등이다. 봉쇄 이유는 박쥐 접촉, 뼈라(대북 전단) 접촉,

중국인 접촉 등으로 다양했다.

문서에는 봉쇄 등급이 ▲완전 봉쇄 ▲봉쇄 ▲2급 봉쇄 ▲임시 차단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 비상방역법에는 지역을 봉쇄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뤄 특급이 완전 봉쇄, 3급이 임시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쇄 기간은 하루 만에 해제된 지역부터 19일간 지속된 지역까지 다양했다. 북한 비상방역법에 따르면 지역봉쇄 및 해제 문제는 비상설 국가비상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북한은 사안의 경중과 검사 결과에 따라 봉쇄 기간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 봉쇄되면 주민들은 집 밖 출입이 전면 차단된다. 주민들은 기약 없이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했다. 봉쇄 기간 주민들은 식량부족 호소하며 고통받은 사례가 속출했다. 심각한 경우 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책임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은 별도의 격리시설로 보내지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집 안에 격리됐다. 집 안에 격리된 사람들은 적절한 의약품도 공급받지 못했으며 고열을 온전히 견뎌야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봉쇄 및 이동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폐쇄하거나 운영시간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곳곳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자유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봉쇄, 이동 제한 등 다양한 조치는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 기타 필수품의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휘발유, 경유, 기계류나 생산시설에 필요한 부속품과 원부자재의 부족은 물가를 요동치게 하고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경제난에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물가는 대폭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위축됐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실제, 데일리NK 정기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초 1kg당 4,350원(평양

기준)이던 쌀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 10월 초 6,400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3년 새 쌀 가격이 약 47%가 상승한 것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밀가루 가격은 1kg당 4,125원(북한 돈)에서 2만 417원으로 거의 5배 증가했다. 통옥수수는 1,320원에서 2,183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설탕은 거의 9배 폭등했다.

식량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식량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의 식량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자유를 막아 오히려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생계난은 주민들을 생계형 범죄로 내몰았다. 군수품이나 협동농장 물품을 빼돌리는가 하면 가정집의 물품을 훔치는 강도도 크게 늘었다. 또한, 성매매에 내몰리는 여성이 늘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영양을 섭취를 하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탈북자 강제 복송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2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화상 연설에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자가 2천여 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 10월 탈북자 600명을 강제 복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남은 탈북자는 이제 남은 사람은 14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은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이러한 귀환이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탈북자는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에, 탈북자는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이들을 일괄적으로 불법 이주자로 분류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난민 협약에서 강제 송환을 금지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복송된 탈북자는 강제 노동, 고문, 처형 등의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 방지협약 등의 당사국으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엔에 서한을 보내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송된 탈북자의 인권 침해는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이 탈북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수감하는 일은 일종의 교정 행위라는 취지의 말도 전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복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고통을 겪게 된다. 지난 2013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정기적 고문 및 자의적 구금,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처형, 그 밖의 중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이 재중 탈북자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거나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사회 안정을 위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에,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에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을 보내 탈북자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 1화

지 한 나 전도사

그 누구의 삶인들 굴곡이 없고 편안하기만 했겠냐마는 과거를 떠올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나의 입을 열고 나의 삶을 들려주길 원한다. 바로 칠흑같이 어둡던, 절망뿐인 내 인생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큰 축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나는 1970년 5월에 농민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 가난하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어린 시절 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을 배우고 싶었다. 의학전문대에 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중학교 6년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대학 진학 시험도 치렀다. 이제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작스런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 70년대 생들은 모두 사회주의 농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 김정일의 말 한마디면 없던 법도 생기는 것이 북한이었기에, 그렇게 나는 어디에 향의도 못하고 의학 공부의 꿈을 접어야 했다.

농장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어느 덧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이쁜 딸도 낳았다.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니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아니 북한 전역에 고난의 행군이 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당시에만 해도 배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배꽃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94년 7월, 신처럼 생각했던 김일성이 사망했고, 곧 이어 일체의 배급이 끊기고 말았다. 집에 있는 것들을 몽땅 내다 팔았지만 날이 갈수록 가게 경제는 악화되어갔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어찌저찌 버티고 살았지만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웠다. 한 번은 어린 딸을 데리고 3일을 꼬박 굶었는데, 정신이 혼미하여 눈이 돌아가고 머리 두껍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그냥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강을 건너 중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중국에는 우리가 꿈도 못 꿀 이팝에 돼지고기를 집에서 키우는 개가 먹는다고 했다. 집이 국경과 가까워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중국이 보이는데, 저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니 굶는 입장에서 그 소식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암만 생각해도 현 상태로는 가족을 먹여살릴 방도가 없었다. 나는 강을 건널 결심을 하고 딸과 애 아빠한테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중국 사람이셨다. 어머니를 보고 반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 북조선으로 내려와 터전을 잡고 사셨던 것이었다. 그 덕분에 중국에 있다는 고모들 이야기도 들어왔고, 친척들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중국행을 결심했다.

호기롭게 딸과 남편에게 중국행을 말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생각하여 길을 나서는데 하필 비가 오는 날이었다. 이제 11살이 된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길을 나서 나를 만났다. “엄마 가는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에 갔다 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가는 것을 알고 있던 딸이었다. “엄마, 우리를 아 이 버리는 거지?” 딸의 말이 가슴을 찢었지만 엄마가 너를 왜 버리겠냐고, 갔다가 꼭 돌아온다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길을 나섰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나는 상당히 무모했다. 어떤 도움 없이 혼자서 강을 건넜는데 하필 나는 수영도 할 줄 몰랐다. 물이 그렇게 깊은 줄 모르고 어쭈어쭈 하다가 물을 한 컷 먹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보니 내 몸뚱이가 중국 쪽 강변의 모래밭에 파묻혀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살아서 강을 건넌 것이다. 허겁지겁 전화기를 찾아 고모네 집으로 전화를 했고, 다행히 연락이 잘 이루어졌다. 놀란 고모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강가로 왔는데, 비

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너무나 많이 불어있었다.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 했던 일이 었그제인데 더 불어난 강물을 보니 선뜻 강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렇게 중국에 상당 기간 머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중국에서 돈을 보내는 것이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중국에 머물기로 결심을 했고, 한 족을 만나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고향에 남아있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향에 돈을 보낼 생각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2007년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공안이 문앞에 서 있었다. 공안은 다짜고짜 나에게 “너 조선 사람 맞지?”라고 물어보았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일부러 중국인인척 중국말로 떠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두 살난 딸을 두고 결국 나는 붙잡혔고, 복송이 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잡아서 복송시키려고 탈북자 한 사람당 100위안을 포상금으로 걸었다. 당시 내가 살던 마을에는 열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포상금을 노린 사람에 의해 그들 대부분이 붙잡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를 신고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닌 같은 탈북자였다. 현상금을 노리고 공안과 작당한 한 탈북자가 우리 모두를 신고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탈북자에게 고발을 당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나는 딸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고향땅을 강제 복송 피해자로서 밟게 되었다. 북으로 넘겨지자마자 보위부의 취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잡아 온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고 검신을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몸 안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보위성 심문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의 모습 (삽화=휴먼라이츠워치)〉

돈이었다. 여자들은 자신의 뱃속에 돈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보위부에서 옷을 벗은 채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백 번씩 시켰고,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몸 밖으로 나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자 수감자들을 눕혀놓고 여자 보위부원들이 장갑을 낀 손으로 직접 속을 다 검사했다. 잡혀갈 당시 나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임신을 했으니 나를 검사하진 않을 것 같아 아래쪽에 돈을 조금 숨겨 두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빼서 다시 잘 보관해두었다.

감신 후에는 철저한 취조가 이루어졌다. 취조의 첫 질문은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였고, 그 다음이 “교회를 간 적이 있는가?”였다. 당시 나는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교회도 출석한 적이 없었다. 다만 한국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은 여럿 보았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조선말을 쓰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분명 조선말

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맛있는 집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기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중국 가족에게 물었더니 대한민국이라고 하였다. 나는 대한민국이 어디인지 몰라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을 믿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남조선이야.” 거짓말인 줄 알았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남조선은 식민지에 집도 없고 판잣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그 당시 중국에서는 북한 엘리트와 김일성, 김정일의 사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물이 돌고 있었다. “진달래꽃 필때까지”¹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 나는 그 드라마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¹ 98년 1월 KBS2에서 방영된 8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 만수대 무용단원 출신 탈북자 신영희가 1996년에 쓴 동명의 수필을 원작으로 했으며, 북한 기쁨조의 일상과 같은 북한 사회 내부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보위부 사람들은 끈질기게 내가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교회에 나갔는지를 물었지만 나는 그냥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앓기만 했다고 잡아 댔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며 각목으로 온몸을 때려 멍이 들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3일을 그렇게 맞고 나니 온 몸이 부어서 더 이상 맞아도 아프지 않았다. 내가 때려도 아파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추운 겨울날 얇은 내의 하나만 입혀서 바깥으로 내보냈다. 눈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로 인한 고통이 밀려왔고, 매 맞는 것 보다 더욱 매서워 견디기 어려웠다. 이러다 얼어 죽겠다는 두려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말을 하겠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렇지만 보위부원이 문을 열어주자 나는 어찌 안본걸 봤다 하고 안 간 곳을 갔다 하겠냐고, 이제 나를 죽이라고 배짱을 부렸다. 나중에는 나에게 종이를 뭉텅이로 주더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별달리 쓸 말이 별로 없어서 10줄 정도 썼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토를 달고 넘여져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지역 안 전부로 이송되었다.

안전부에서도 사람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형량이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임신을 했으니 감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 오산이었다. 내 서류를 보고 다시 심문을 진행한 후 내려진 판결에서 나는 3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되었다. 전거리 교화소에서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선고된 형량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임신부이니

까 봐주겠지 생각 했지만 담당 간부는 “임신이라고 널 감옥에 안 보낼거 같으냐?” 라고 하면서 다음날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달아날까 봐 손을 꽂꽂 묶어놓고는 배에 주사를 놔다.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주사였다.

당시 나는 임신 5개월이었는데 배꼽에 주사를 놓으니 시간이 지나 아이가 나왔다.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의 이마 중간에 주사 때문인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아이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다고 하는 걸 사정사정 부탁을 해서 버리지 말고 물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입던 옷을 벗어 아직 죽지 않은 아이를 싸서 덮어주었다. 어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였다. 그 당시 나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기에는 그 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있다.

인간으로서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아이를 방금 출산한 임신부에게 마땅히 필요한 회복의 시간과 장소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빨리 교화소에 수감시킬 생각 뿐이었다. 몸과 마음이 매우 허약해져 있었던 나는 야외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다가 밀려오는 찬 바람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만약 화장실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동통에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해야 했고, 3일 만에 교화소로 이송이 되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핵의 변곡점
저자: 시그프리드 헤커,
엘리엇 세르빈
출판사: (주) 창비
발행일: 23년 10월 27일
가격: 30,000원

23년 한 해동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화성-18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최근에는 군사위성 발사와 관련한 갈등도 있었다. 북핵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점차 심화되어왔고, 종종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되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든다.

오늘 소개할 책, 핵의 변곡점(Hinge Points)는 이런 맥락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여타 도서들과 비교해 더욱 특별하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북핵 문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곳으로 알려진 미로

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저명한 핵물리학자이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일곱차례에 걸쳐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는 등 북핵 문제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헤커 박사의 저서 이기에 이 책을 발견한 순간 자연스럽게 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에서 헤커 박사는 자신의 북한 방문의 경험과 북한에서 만난 학자 및 관료들과의 대화, 또 미국에서 각 정권의 외교 및 국방 관련 관료들과의 북핵 문제에 관한 소통 등 그만이 가질 수 있었

던 북핵 관련 경험과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 책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닌, 그 동안 실패 일변도였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측면에서 기록하였음을 강조한다. 특히 그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펼친 외교가 정권을 막론하고 실패해왔다는 점이다. 헤커 박사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했던 결정과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며, 그 때마다 미국 정부가 악수를 두었음을 지적한다.

헤커 박사는 미국 정부의 실패 원인은 주로 이데올로기나 북한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의미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무책임하게 문제를 방치했던 것을 주로 꼽았다. 협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래를 주고받는 행위인데, 적어도 헤커 박사가 보기에는 미국이 북핵 협상에 들어가기 전

부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거래가 아닌 포기와 항복을 종용하는 형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협의에 도달하더라도 북한의 한두 가지 일탈적 행위에 협의를 엮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헤커 박사가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시리아에 영변형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것이나 김정은 집권 직후 이루어진 위성 발사 등 북한도 많은 오판을 저질렀고 협상이 결렬되는 이유를 여럿 제공했다. 그렇지만 헤커 박사가 보기에 북한은 적어도 일관된 자세와 전략을 유지했다. 바로 외교와 핵개발이라는 이중경로 전략이다. 북한은 90년대 급변한 외교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은 워싱턴과의 화해이지만, 그 화해는 유약함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력이 한참 떨어지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은 결국 핵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북한은 한 편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의 화해와 양보, 즉 체제 안전 보장을 얻어내고자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갈팡질팡했고, 과거 제대로 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에 비해 현재 북한은 다수의 핵무기와 상당히 발전된 미사일 기술을 갖춘 국가가 되고 말았다.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과학자이다 보니, 북핵 문제에 대한 헤커 박사의 견해는 확실히 특별하다. 그는 북한에 대해 그리 신뢰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악의 정권이고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등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국내외 정치적 역학 관계는 그의 북핵 문제 접근



〈2004년 북한을 방문한 시그프리드 헤커(왼쪽 넷째) 박사가 영변의 냉각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에서는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핵물리학적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본다. 즉 자신이 직접 핵 시설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 역량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의 주장과 실제 핵프로그램 진전을 비교하고, 각 시점마다 일정도의 불능화 작업과 일정도의 개입이라면 물리적으로 북한 핵개발이 억제될 수 있겠다는 과학적 분석을 도출한다. 이는 상대방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종종 일탈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개입과 조치로 그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로 핵물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에 제시할 수 있는 값진 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관리 가능할 정도의 위험만 감수하면 평양이 핵무기 폐기로 가는 외교의 길을 나서도록 유도할 가능성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자로서의 분석과는 달리 북핵 문제는 외교적 실패를 거듭했고 이제는 북핵 대화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다달은 것처럼 보이니, 이에 대해 그가 느끼는 아쉬움이 이 책 곳곳에서 느껴졌다. 북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

고 이를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헤커 박사의 이러한 북핵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접근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계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쓰여졌다. 헤커 박사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여 협상의 판을 엮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비이성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책에 진솔하게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헤커 박사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불신은 또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그리고 정치적 또는 윤리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체제 보장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대가 지불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일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 자 독재국가로 악명 높은 북한에 대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지속 유지할 수 있었을지... 예상되는 국내외의 반발과 윤리적 문제 제기를 감당할만한 자신 또는 확신이 그 동안 미국의 정권과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다.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측면에서는 기술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외교 관계 수립이나 체제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이기에 이로 인해 미국의 행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핵 문제는 핵군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북한 정권의 통치 기조가 전환되고 인권 상황이 개선됨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

뢰와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까지 연결된다. 물론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북한이 자연스럽게 외부세계와 교류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주요한 대안 중 하나이기에, 이러한 논의는 단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선후 관계가 상당히 큰 난제로 보인다.

이 책은 여러 핵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자연스럽게 언급한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친절하게 이를 소개하고 있고 별도의 챕터를 할애해 핵에 대한 기초정보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면 북핵 문제의 기술적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책에 언급된 기술적 설명은 각 시기마다 헤커 박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핵 시설 동결 및 폐기 조치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핵 문제가 무력 충돌과 피 흘림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의 최전방에 있었던 헤커 박사의 조언을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또 흔히 접하기 힘든 기술적인 접근을 다루고 있는 헤커 박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일독을 권해본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시



〈12월 19일 북한이 공개한 화성-18형의 발사 모습〉

북한이 23년 12월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 측의 보도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8형은 액체 연료 주입 절차가 없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이다.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ICBM 1발은 80도 이상의 고각(高角)으로 치솟아 1000km가량 비행한 뒤 해상에 떨어졌다. 함침은 최고 고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 방위성은 6000km 이상으로 추정했다. 정상 각도(30~45도)로 쏘으면 1만5000km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파리·런던 등 유럽을 비

롯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에 의해 논밭이 보이는 도로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여 불시에 임의의 장소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23년 4월과 7월에 이어 벌써 3차례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만큼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의 실전 배치는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는 만큼, 이후에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G7 외교장관들은 12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12월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시작 전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국정원 “북, 대러 노동자 파견 추진 움직임… 동향 주시”



〈23년 12월 북한을 방문한 올레그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와 대표단 (사진=조선중앙통신)〉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최근 대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23년 12월 12일 밝혔다. 지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러 노동자 불법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벌이 수단이 필요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청

년층을 몰아넣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러시아로 노동자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과거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사실이 지난 10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올레그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지난 12월 11일 북한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당국자는 12월 12일 취재진과 만나 "9월 러·북 정상회담, 10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11월 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방북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협력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참고: 연합뉴스, 23년 12월 12일)

북한 ‘인권 백서’ 발간… “미국·서방이 무참히 인권 유린”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년 12월 11일 밝혔다.

통신은 백서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서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 범죄와 인종차별, 경찰 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인권이 보장된다고 강변했다. 통신은 "가장 인민적인 인권 보장 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

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은 국제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은 북한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악마화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주장하며, 참다운 인권은 오직 국권을 철저히 수호할 때라야만 담보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언급하며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내세웠다. (참고: 연합뉴스, 23년 12월 11일)

김정은, 어머니대회에서 사상무장 강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지난 12월 3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개회사와 폐막연설을 모두 진행했다. 첫 날 개회사에서 김 위원

장은 "지금 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산주의적 미덕과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꼽았다.

12월 4일 폐막연설에도 나선 김 위원장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속에서 의식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 없다"고 체제 결속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고: VOA, 23년 12월 9일)

북, 4G 통신서비스 시작



〈북한의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관련 보도 장면. '4G', '4세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스마트폰 광고 문구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의 오늘, 데일리NK 재인용)〉

북한 일부 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가 시작되고 가입자 모집이 진행 중이라고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12월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4세대 이동 통신을 위한 통신 탑 구축은 일부 지역에서만 완료된 상태이며, 그에 따라 평양시 중심구역 일부에서만 4G 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당국이 오는 2025년까지 4G 인프라 80%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23년 12월 22일)

1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G7 외교장관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에서 대응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화성 18형은 고체연료 미사일로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일부 기술적 한계는 있지만 사거리상 미국 본토 타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전후하여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통제조치의 장기화 및 한류 미디어를 포함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의 행태 처벌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법률과 강화된 단속 및 처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는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공포정치 속에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향을 돌이켜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외에도 선교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수감되어있는 1천여명의 탈북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송된 이들이 당할 강도 높은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큼니다. 강제 복송을 당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불합쳐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5 해외 북한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북한의 국경통제가 완화되고 관광 및 인적 왕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이나 북러관계 밀착으로 인한 러시아 내 탈북자에 대한 처우 악화 등으로 선교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이 안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현지 교회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북한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의 측면에서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북한은 에너지나 난방 사정, 그리고 주거환경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합니다. 또한 빈부 격차에 따른 에너지 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반도로 북극한 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북한 서민들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경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12월 29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는
선교를 위한 자료 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호를 시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